

## 부천 소각장, 광역화 '무산' 가능성 커

부천시, 주민 반대에 단독 사용 검토  
인천시 "공시 발표 아직, 광역화 준비"

경기도 부천시 소각장의 광역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각장을 사용해야 하는 부평구와 계양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천시는 광역화보다 부천시 단독으로 사용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부천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주민 반발이다. 조용의 부천시장도 광역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의식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지난해 10월 인천시에 광역화 대신 현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이전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광역화가 무산됐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광역화가 무산되면 부평구나 계양구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고 인천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 구에 전달했다.

적절한 소각장 위치를 찾기 위해 입지선정 계획 공고도 준비 중이다.

인천시는 2020년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평·계양구 권역 소각장 대상으로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땅을 검토했으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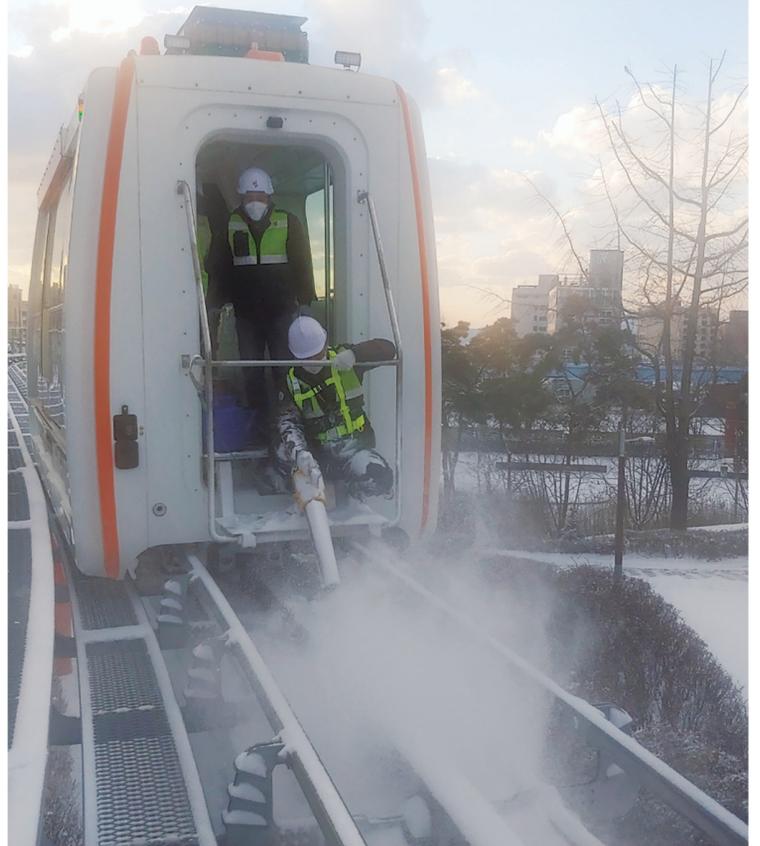
민과 정권권 반발로 부천시 소각장을 함께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아직 조심스럽다. 아직 부천시와 인천시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만큼 시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부천시의 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인천시의 계획이 나오면 그때 인천시와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광역화에 조정을 맞추고 준비할 것이다. 광역화가 무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각적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방향을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삿별 기자



월미바다열차 안전운행 '구슬땀' 인천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26일 오전 월미바다열차 철로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눈을 치우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제공

## 영종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 자금 조달 '빨간불'

RFKR, 2단계 사업 예정지 매각 실패  
카지노업 사전승인 기간 재 연장 신청  
문체부, 자재·자금조달 이행내역 요구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 예정지. 네이버 지도 갈무리

색에는 실패했다.

사실상 카지노업이 연장된 후 1년 동안 인척된 내용이 없는 셈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RFKR이 카지노업 연장에 대한 조건에 대해 물리적으로 이행한 내용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라며 "연장 신청이 다시 들어오면 절차에 맞춰 심의를 진행하겠지만, 앞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앤에프코리아는 땅 매각에도 실패했다. 3단계 사업지인 공동주택부지(8만 9385㎡)는 한 시행사에 매각 후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지만, 주상복합시설용지 등이 있는 2단계 사업지(5만 805㎡)는 기존 매각 대상자와 계약 이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와 2단계 사업지 매각 협상을 다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부동산

경기도 볼 때 잔금을 한 번에 치를 수 있는 대상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국에 있는 모기업 푸리의 상황도 심각하지 않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그룹 하나가 디폴트에 빠지며 공산당의 외면을 받았고, 최근에는 중국 정책 자금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CPPCC)'에서 중국 부동산 부호들이 대거 배제됐다.

정협에서 쫓겨난 인물 중에는 광저우푸리 창업자인 장리 회장도 포함돼 있다. 그는 미국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체포됐고 이후 16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호텔에 갇혀있다.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RFKR은 영국 국민인(RFKR)과 홍콩푸리를 거쳐 광저우푸리로 이어지고, 사업 예정지를 소유한 알앤에프코리아도 최상위 지배기업은 광저우푸리다.

이에 RFKR 관계자는 "2단계 부지 매각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3단계 땅은 매각했지만 세금 납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시세 차이는 없다"며 "그동안 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문체부에 제출해 카지노업 연장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욱 기자

##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문제 실마리 풀렸다

시의회,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가결  
주민 80% 동의시 실행사 통해 추진

십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문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26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동의안에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해 이주부지를 취득한 뒤 이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 8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인천 송도 아암몰류2단지(5만 4550㎡)다.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시는 인천해수청과 국·공유재산 교환(1단계)을 시작하고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해 실행사 통해 실행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2단계)한 뒤 잔여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토지 교환을 할 때 생기는 교환차액은 주민들이 부담한다. 교환차액은 25억 원이다. 대신 주민들은 인천시와 교환할 때 건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에 납부할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같은 동의안에 대해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명주(민주·서구6) 시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이주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 특성일 뿐이다"며 "재산 교환에 대해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어렵게 합의한 만큼 원활한 이주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06년 항만시설의 소용 분선 등 환경피해가 극심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인천해수청과 주민들이 직접 땅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입장차가 커 사업은 장기간 지지부진했다.

시는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추진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사업은 본격도에 올랐다.

박소영 기자

14 [이것만은 꼭] 김진구 미추홀구의원

15 인천편 "시, 중기 탄소중립 대응책 절실"



**Yangju 양주시**

##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 ! 시민 중심의 열린도시
- ! 행복 동행의 복지도시
- ! 동반 성장의 경제도시
- !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도시
- ! 미래 선도의 교육도시
- !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